

反射鏡

「環境優先」에 밀린 八堂 骨材採取

국민환경보전의식 높아져 · 支川保全策이 문제

우여곡절 끝에 八堂湖 골재채취계획이 29일 열린 제3차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백지화됐다.

鄭元植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개발」에 으레 밀려왔던 「환경보전」이 비로소 개발보다 더 크게 인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의 건축자재난 타개를 위해 거론되어온 八堂湖 골재채취계획이 무산된 것은, 지난해 여름의 수도물 파동, 지난 3월 洛東江 폐놀오염사건을 계기로 부쩍 높아진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계획은 89년 5월 경제기획원이 주최한 「수도권 자재수급대책회의」에서 처음 거론돼 골재채취방침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京畿道의 채취허가 공식발표가 있자 환경·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지난해 4월 골재채취사업의 일시중지를 京畿道와 허가업체인 三표산업측에 요청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준설을 4개월간(90.8~90.12)에 걸쳐 실시했다.

시험준설결과 八堂湖에서 자갈 등을 캐내더라도 수도권 주민들이 마실 물의 質에 별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환경처는 발표했다.

즉 ▲八堂湖 바닥에 쌓인 퇴적물 성분중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底泥類)은 0.5%에 불과하고 ▲유해물질인 농약·수은·카드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골재채취로 생기는 부유물질도 제1공구 하류 3km까지만 확산돼 上水취수구(준설지점에서 7.2km 위치)의 수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水質惡化시키는 富營養化우려制動

서울大·高麗大·仁荷大 등 학계와 국립환경연구원등 15명으로 구성된 당시 시험준설조사팀은 그러나 『단기조사로 준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할 수 있으나 누적효과 및 2차적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여기에다 서울大 金相鍾교수(미생물학)팀은 『준설지역등 八堂湖 5개지역을 조사한 결과 골재채취는 식물성 플랭크톤을 엄청나게 늘어나게 해 물속 산소를 고갈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富營養化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골재채취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같은 과학적 지식 등을 토대로 공해추방운동연합·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등 단체들은 토론회 개최, 공청회 참석등 다양한 압력수단을 총동원, 八堂湖 골재채취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환경처도 한동안 내부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大勢에 밀려 不可로 結論

韓相旭 환경처 조정평가실장은 『오타방지막·오일펜스 등을 설치해 하루 3천입방m 정도의 자갈등 골재를 캐내면 수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골재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대세에 밀려 「不可」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전위는 29일 회의에서 八堂湖에서 자갈등 골재는 캐내지 않지만 93년부터 京安川등 八堂湖로 흘러드는 漢江지천에 대한 준설작업(예상예산 약6백억원)을 실시키로 하고 우선 내년에 3억~5억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해 여운을 남기고 있다. (7.30. 中央日報)

國民의 生命지킬 意志있는가 豫算是 늘어도 環境部門은 縮小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물과 공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물과 공기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와 관심도를 보면 과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경제기획원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규모가 24%나 증가했음에도 환경예산부문은 환경처와 건설부 등이 당초 요구한 액수에서 무려 58%나 깎여버린 4천6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금년의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환경부문 총예산액보다 90억원이나 오히려 줄어든 액수다.

물론 부처마다 요구하는 예산액을 다 들어주기는 힘들지만 수도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고 대도시의 공기오염이 심각한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낙동강 폐놀오염사건, 저질유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자동차 매연현상, 도처에 버려진 산업쓰레기등 온갖 피해를 눈으로 훤히 보고서도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요구한 액수의 42%만 책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태우대통령도 정부의 명예를 걸고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하지 않았던가. 급하지도 않은 경부고속전철은 10조원이나 들여 건설하겠다는 정부가 가장 시급한 환경보전문제에는 왜 그리 소홀

하고 의지가 약한지 모르겠다.

고작 생수시판이나 허용하고,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단속기준만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할일인지 묻고 싶다. (9.5. 中央日報 독자의 廣場)

自然의損傷을 犯하면開發이아니다

漢江시민공원개발 自然보호와 調和를

서울시가 漢江시민공원을 발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려는데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

현재 유명무실한 각종 수상놀이 시설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유람선 확대운행, 한강변의 명승지 복원 등이 주요 계획내용이라는데 모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市당국에서도 잘 알아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전의하고 싶은 것은 한강수질의 획기적인 청정화와 기존 한강 자연형태의 유지를 하나의 대원칙으로 삼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세계적 대도시 江등이 비슷하겠지만 수질오염의 고욕을 다 당해 시민들의 폐적한 생활에 위협이 된 사례가 더러 있음을 거울로 삼아 상류지역, 각종 시설물 확충에 따른 예상오염지역 등을 깨끗이 보전하는 방안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과거 더러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개발을 내세워 아름다운 한강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인위적인 시설물과 변형으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일시적인 성과와 편의를 내세워 돌이킬 수 없는 자연의 손상을 범하는 것은 결코 개발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한강을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어 온 시민과 우리나라라는 물론 세계적인 사랑과 부러움을 받을 수 있고, 후손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9.12. 서울신문 발언대)

이 江山 푸르고 깨끗하게